

시민사회 참여 동인 분석: NPO 가입과 공공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이주영**

〈目 次〉

-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 결과 |
| II. 선행연구 | V. 결론 |
| III. 실증분석의 설계 | |

〈요 약〉

이 논문은 비영리 부문의 시민사회 참여 실태를 'NPO 가입'과 '공공활동(자원봉사) 참여'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KGSS 한국사회과학조사 2012년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1,275명의 대한민국 남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 분석했다.

분석결과 가구소득액의 증가는 NPO 가입과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 모두를 높여주었다. 그러나 주당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공공활동에 자원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한 곳에 장기거주한 경우 공공활동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러한 장기거주 효과는 여성에게는 낮게 나타나, 성에 따른 차등 구조가 발견된다. 한편 정치적 효능감, 즉 자신 같은 사람도 국정에 대해 의견 개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NPO 가입이나 공공활동에 자원봉사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NPO에 가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비영리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신뢰는 시민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시민들을 NPO에 가입하도록 하는 데는 소득 증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같은 적극적인 참여로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개인 활동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특정 정치 이념과 가치가 비영리 영역 안에서 지나친 우위를 점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할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 공공교육과정에서 타인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는 한편, 공공 이슈에 대한 의견 개진 통로를 열어놓는 등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시민사회, NPO, 자원봉사, NGO】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 A2924832).

** 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성균관대 행정학과 강사(jooyoung@skku.edu) 논문접수일(2020.4.25), 수정일(2020.6.22), 게재확정일(2020.7.3)

I. 서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이다(OECD, 2019a). 사회적 신뢰 기반이 약하고, 시민들의 사회 변동에 대한 불안과 고립감도 깊다.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를 기록한 나라(통계청, 2020),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OECD, 2019b). 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OECD, 2019a).¹⁾ 지역과 국가를 넘어 글로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제는 날로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도 정부도 그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박상필, 2001). 자율적 운영 원리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더 크게 부상하였다.

Tocquevill(1969)은 민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통합(to combine)의 지식’을 꼽는다. 여기서 통합이란 사회 내 다양한 주체를 잇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을 뜻한다. 이 지식이 얼마나 구축돼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는 결정된다. 학자들은 토크빌의 이 주장을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사회 문화적 가치와 연결 짓곤 한다(Ayala, 2000; Bachrach 1967; Barber, 1984; Dahl, 1970; Putnam, 1995a, 1995b). Tocquevill이 사용한 단어가 권력(power)이 아닌 지식(knowledge)이었다는 점에서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회 저변으로부터 창출되고 쌓여가는 통섭적 지도 원리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결사와 활동을 통해 경험적으로 축적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87년 체제’ 이후 비영리조직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민간화(privatization)와 권한 이양(devolution)의 기초가 국내로 유입된 측면도 강하다. 정부는 사적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다양화하게 됐다. 또 서비스 공급에 관한 결정 권한 등을 자치 정부 등에게 위임해 수요자 레벨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됐다. 이에 국가는 더 많은 민간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NPO 숫자와 역량도 커진 것이다(Marwell, 2004).

그러나 NPO의 성장을 공공부문 수요 증대만으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 대한민국 국민 중 약 30%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은 순위이다(OECD 평균 43%, 스위스 81%, 룩셈부르크 71%). 한국은 특히 사법제도와 경찰에 대한 불신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소득 수준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OECD, 2019a). 한편 통계청(2020)이 발표한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명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한 유일한 나라이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OECD, 2019b).

정부의 보조, 서비스 다양화 등이 NPO 성장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는 NPO의 규모와 성장세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Rose-Ackerman, 1996). NPO가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돕는 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Weisbrod, 1988; Clotfelter, 1992),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 커지는 이타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이 NPO의 힘을 더 키우는 또 다른 동력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타주의가 반드시 조직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되짚을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식이 꼭 체계화된 모임과 조직으로만 구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친구 이웃 가족은 서로 도울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이 베푸는 자발적인 은혜가 이타주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Hodgkinson & Weitzman, 1994).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 집회와 시위를 통한 참여 정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민들의 운동성은 개인의 학력이나 나이 같은 자질에 기인하기보다는 정부나 정책에 대한 항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시민들은 NPO 조직 가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조직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참여 정치의 동학을 구성해 나가기도 한다(주성수, 2017). 그런 점에서 NPO 조직의 숫자나 크기를 재는 것에 못지않게, 잠정적이고도 일시적인 공공부문의 봉사 참여 정도도 한 사회의 '통합적(combining) 지식'의 한 축으로 정확히 인식돼야 한다.

한국의 비정부 부문은 1990년대 이래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국내총생산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박태규, 2006). 그러나 실제 숫자의 증대와 함께 참여의 질에 대한 논의는 소원하다. 어떤 조직이든 소비자들에 의해 통제받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에(Ben-Ner, 1986), 건실한 민주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한편 시민사회가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 되려면, 그 정의를 구체화하여 경험적인 관찰 및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치사회를 보완하고 때로는 이와 경쟁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민주화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임혁백, 2000). 이제는 그 발전 단계에 맞게, 시민사회를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단순 구성 요소가 아닌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모종린, 2004). 그러려면 무엇이 시민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약화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 논문은 시민사회 참여의 축을 NPO 가입과 공공의 활동 두 차원으로 나누어 시민사회 참여요인을 분석해 볼 것이다.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비영리 분야로 접근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공공조직에 가담하는 인적 구성의 성향과 이와 달리 일시적 활동이라도 공공을 위해 봉사하

려는 사람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요인들이 시민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시민사회와 참여

시민사회란 공공의 영역으로서 연대와 결속이 일어나는 장이다. 그 안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며 서로 부딪치고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서로 다른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 사이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사회는 이 충돌과 조화와 관계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Miszlivetz, 1999: 427).

중요한 점은 시민사회를 사회 내 존재하는 기관(organizations)들의 총합으로 인식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재귀성(reflexivity)을 지닌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재귀성이란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고, 원인 탐색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을 실험 또는 시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지엽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부터 극히 전문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것들에 관해 이해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Butcher et al, 2007). 그리고 이를 통해 비판하는 시민 공동체라는 규범이 조금씩 완성된다(Miszlivetz, 1999). 숙의나 재귀성은 결국 함께 모여 의논하고 활동하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라는 공동체가 본 기능을 떨 수 있게 되는 것이다(Warren, 1963).²⁾

현대 사회에서의 참여는 결사체를 통해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Tocqueville(1969)은 나이나 생활 조건, 그리고 성향 차이를 불문하고 미국인들은 결사체를 조직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美) 화재 보호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미국 내 등록된 소방 자원봉사대원은 745,000명으로, 직업 소방대원 370,000명보다 많다. 자원봉사 소방대원은 직업 소방대원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일하는 소방대원의 66.82%를 차지한다(Evarts & Stein, 2020). 이 자원봉사 소

2) Warren(1963)은 시민사회라는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화(socialization), 경제적 부(wealth),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적 통제 기능(social control), 상호 공조 시스템(social support)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화란 특정 중요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며, 경제적 부는 구성원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사회 참여는 사회화 즉 공동체의 중요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욕구를 실천을 통해 이루는 작업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호 공조 시스템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어 풀어가는 숙의의 과정을 의미한다.

방대는 미국에서 수 세기 동안 존재해온 양동이 소방대나 손수레 소방대가 사라진 뒤인 1983년 이후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가장 미국적인 풍습 중 하나로 꼽힌다(Edwards, 2020). Tocqueville은 이러한 결속과 참여의 힘이 미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든 초석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추동력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 1970~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한 세력이 바로 재야, 학생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세력이었다.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세력들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개혁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모종린, 2004).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영역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동력이 많이 약한 상태이다.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큰 편이고, 정부와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사회봉사나 기부문화도 매우 취약하다. 사회 불안은 커졌으나,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김석호, 2014). 김석호(2014)는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적 효능감의 부재를 꼽는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자신의 행위가 정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교적 많은 정치 사회적 정보에 접근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것이다. 독재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의 벽을 경험한 역사는 이를 더 심화한 측면이 있다.

한편 시민단체 운영 행태가 과거의 하향방식(Top-down)에서 자발적인 참여의 형태인 상향 방식(Bottom-up)으로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형태의 전통적 참여 형식을 넘어, 온라인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의 하나로 지목된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민성을 고려한 시민 교육이 건전한 시민사회 구성을 위해 더 절실해질 것이다(옥일남, 2017).

사회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지지기반(constituency)이 넓어져야 한다. NPO는 많아도, 실제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적다는 비판은 NPO가 시민사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NPO가 전통형 사회관계만 양산 하면서 사회적 자본으로 위장하고 있거나, 기형적 공공재를 생산할 가능성도 크다(조효제, 2000).

2.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NPO)이란 자체의 관리 절차를 가지고 공공 목적에 봉사하는 단체를 뜻한다. 일반적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와 대비되며, 영리를 추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과 다르다.³⁾ 비영리조직은 흔히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로도 불린다. NGO는 정부 이외의 기구를 뜻하는 단어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공식조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NGO에는 NPO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병원과 교육기관, 종교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NGO는 NPO보다 좁은 개념이다(박상필, 2001).

비영리 기관 사이의 관계는 크게 수요-공급 차원, 시민사회와 운동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중 수요-공급 관점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비영리 기관의 부상이 갖는 의미에 집중한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는 크게 시장 틈새 모형(Market Niche Model)과 거래 모형(Transaction Model)이 있다.

대개 시장은 무임승차자(free-rider)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재 공급에 큰 관심이 없다. 때로는 시장의 활동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해,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 같은 시장실패에 정부가 반응하게 되면,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적은 비영리단체가 먼저 시장실패에 응답하고, 이것이 불충분할 때 정부가 나서게 된다. 시장 틈새 모형(Market Niche Model)은 이처럼 시장이나 정부가 미처 충족시켜 주지 못한 공공 수요를 비영리 기관이 공급한다고 설명한다. 비영리 기구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시장에 속해 있는 조직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결함이나 부족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시장의 속성을 가진' 조직이라 할 수 있다(Smith & Grønbjerg, 2006). 또 정부가 생산해내기 어려운 특정 재화를 공급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Weisbrod, 1988).⁴⁾

한편 정보가 불균형한 곳에서는 다른 형태의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서비스 구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질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계약실패'(contract failure)라 부른다. 자녀를 탁아소에 맡겨 놓은 부모는 직접 돌

3) 비영리조직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우선 사람과 관련 업무로 이루어진 제도화된 조직이다(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부문에 속하며(private organization), 자체 의사 결정 구조가 있어 활동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다(self-governing).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voluntary),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소유주 혹은 기부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non-profit distribution).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탁아소·병원·요양원 등 사회서비스 및 보건 기관, 문화 예술 및 교육기관, 종교단체, 자선활동 기구, 연고 단체, 산업 및 전문가 직능단체 등이 모두 NPO에 포함된다(박상필, 2001; 박태규·정구현, 2002; Salamon: 1995).

4)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공공재 생산은 선거를 통해 결정되므로, 정당과 정부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가 선호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려 한다. 따라서 이 선호 밖에 위치하는 다른 시민들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존재한다. 이에 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Hansmann, 1987; James & Rose-Ackerman, 1986: 29; Weisbrod 1988).

봄을 받는 주체가 아니기에, 영유아가 직접 받는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때 영리 단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Nelson & Krashinsky, 1973).

거래 모형(Transaction Model)은 비영리 기관과 정부 모두에 약점이 있으며, 이 약점은 상호 협력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대개 비영리 기관은 가용 자원 부족에 시달리며(insufficiency),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한다(amateurism). 또 기관이 목표로 하는 대상 집단 이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particularism), 중요 의사 결정은 비영리 기관장 같은 내부 엘리트에 의해 권위적이고 은밀하게 결정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일 때도 있다(paternalism). 분명한 점은 정부와 비영리 기관 사이에 파트너십을 통해 거래와 교환이 발생하면, 서로의 약점과 강점이 혼합되어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비영리 기관의 실패와 정부 실패가 상쇄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Salamon, 1995: 44-49). 실제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시민단체' 사이의 관계를 부(-)의 관계가 아닌, 정(+)의 상관관계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정한울, 2016).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운동과 사회자본 관점은 비영리 부분의 존재가 좋은 정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지 국가 등장으로 국가의 역할은 가족과 개인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었다(Hayek, 1960; Smith & Grønberg, 2006). 비영리 기관 같은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국가의 시도를 좌절시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께 보장해주는 체제로 사회를 유지한다. 특히 Tocqueville의 사상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 관점은 공동체주의와 사회자본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중시한다. 전제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유지하며 정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방안으로서 3권분립을 통해 행정부 권력을 통제하고, 자율적 민간단체를 통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Tocqueville, 1969).

Brooks(2002)는 1990~1998년 사이 미국 비영리 부문 관리에 관한 연구 문헌의 흐름을 조사하였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영리조직의 구조 연구(14%), 인적 자원 관리(12%), 비영리 기관의 적응 전략(9%)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활동에 대한 기관의 성과 측정, 이사회, 리더십(각 8%) 등이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영리조직 구조나 회계에 관한 연구가 취약하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 미비, 정보 공개 제도의 미 활성화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박태규·

정규현(2002)은 비영리 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추계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NPO가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대안 마련에는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우국희·홍선미, 2009).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학자들이 NPO에 직접 참여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 참여로는 NPO 내부의 개혁을 이뤄내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남궁근, 2007).

한편, Rose-Ackerman(1996)은 비영리조직이 갖는 이타성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학적 프레임으로 비영리조직을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NPO는 이제 기부나 자선의 동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도구도 아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선이나 기부와 같은 행위가 NPO 성장의 중요한 동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을 놓고 경제적 분석을 하는 것은 NPO의 성장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NPO가 사적 조직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인간에게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조직 구조와 연계시키는 작동원리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에는 신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Trust)란, 일반적으로 약속을 유지하며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는 상대방의 능력(ability), 정직(honest), 이타심(altruism), 호의(goodwill)에 기초한다(Castaldo et al., 2009). 즉, 감시나 통제 없이도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상태인 것이다(임기성·박봉규, 2013). 이러한 신뢰는 경험을 통해 커지는데,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한다(Ravald & Grönroos, 1996; Rempel et al., 1985). 기본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조직이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게 해준다(Eggers et al., 2013). 따라서 비영리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도 신뢰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참여를 통한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제도로서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다. 시민단체 운영진에 대한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다(정한울, 2016).⁵⁾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참여자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NPO 조직 안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aldwell et al.(2008)은 여기서 인구 구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5) 정한울(2016)은 KGSS 설문지에 담긴 기관에 대한 평가와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두 측면의 신뢰가 다른 경로로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시민을 대상으로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비영리 영역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노년층은 은퇴 이후에도 공공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상당하기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년층의 인력 자원을 NPO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이들을 유인하는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이타적인 관점 즉, 타인과 사회를 돕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젊은 참가자들은 NPO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활동 가치에 초점을 두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이들 연령층을 봉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이들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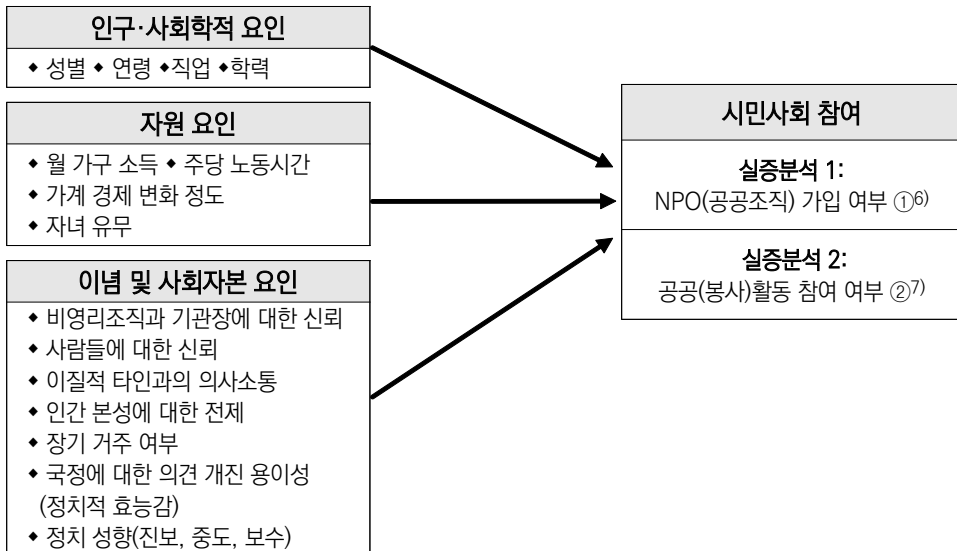
이외에도 학자들은 개인이 조직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오는 긍정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Bachrach, 1967; Barber, 1984; Blumberg, 1968; Cole 1919; Dahl, 1970, 1985; Mason, 1982).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향후 정치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NPO 참여가 공공의 문제를 함께 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나중에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NPO에 참여하는 경험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축적된 시민의 기술(civic skills)'로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들은 서비스의 수요자임과 동시에 투표자이다. 시민들은 NPO에 대한 지지자가 되므로, 누가 NPO 활동에 관심을 보이느냐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와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NPO의 참여를 더 많이 하는 측이 정치적 의사 결정 능력과 정권 창출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Marwell, 2004).

한편 미국에서는 고소득, 고학력자, 종교를 가진 자, 기혼자,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odgkinson et al., 1996). 한국은 시위 참가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의 참여비율이 높으나, 중위 소득자의 시위 참가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민단체 가입이나 활동 참여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했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NPO의 내부 의사 결정 시 간부나 자원봉사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NPO가 후원자인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존재한다(모종린, 2004). 또 일반 자원봉사 활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주민이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계층에서 활발한 참여를 보이기도 했다(이강현·김성경, 1999).

다음의 <그림 1>은 본 논문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분석 구조를 모형으로 담았다. Selander(2015)가 제시한 제 3 섹터 참여 모형과 김석호(2014)의 시민사회 설명 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Selander(2015)는 참여를 이끄는 요인에 가치 정합성 등의 이념적 차원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성별 및 연령을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소득과 자녀 유무, 주당 노동시간 등을 자원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이념 및 사회자본요인으로 분류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림 1〉 분석 모형



Ⅲ. 실증분석의 설계

1. 분석 대상과 원시 자료의 검증 선별

데이터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12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12년 정기 설문에 EASS(East Asian Social Survey)의 Network Social Capital 조사 모듈을 넣었다. 여기에는 NPO에 대한 개인의 가담 정도 및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등 사회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이 포함돼 있다. EASS는 한국의 주도로 지난 2003년에 신설된 동아시아 사회조사 연대기구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하는 4

6) 정치모임, 사회봉사클럽, 시민단체, 소비자협동조합 미가입/ 가입

7) 지역사회 개선, 스포츠·문화·예술·학술, 취약집단 관련, 정치적 이슈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유무

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관들 사이에 국제지역 연구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금까지 5번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12년에는 비영리조직과 참여 활동에 관한 국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 논문은 EASS 모듈 외에 일반적인 인구 사회학적 배경과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문 결과도 함께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이항 로짓을 적용해, 종속변수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산출했다. 그리고 각 변수가 종속변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률로 계산해 낸 후, 그것의 최대 변동 폭을 확인했다. 이항 로짓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특정 변수가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변할 경우, 종속변수인 NPO 가입 확률이나 공공활동 참여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개별적으로 계산해낸 것이다. 이때 해당 독립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값은 각각 평균값에 고정되도록 설정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 확률로 계산해주므로, 그 가치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Long & Freese, 2006).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패키지는 STATA 15.1이다.

3. 변수 선정과 측정

1) 종속변수

첫 번째 종속변수는 NPO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정치모임, 사회봉사클럽(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 시민사회단체·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조직이나 공식 모임에 가담한 정도에 관해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구성원이 아니다.’, ‘구성원이나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구성원이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세 가지 중 하나에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이들 조직의 구성원 여부를 가늠해 만들었다.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와 구성원인 경우로 이원화된다. 기준범주(=0)는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이다.⁸⁾

8) NPO 활동 상태는 각 모임에 대하여 응답자가 ‘모임에 적극 참여’, ‘거의 참여 안 함’, ‘미가입’ 중 하나에 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설문 답지를 그대로 구성해, 다항 로짓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항 로짓을 통해 얻은 추정값은 기준범주와 종속변수 하나 사이의 관계를 각각 분절해서 보여준다. 즉, 기준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속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표 1>에서 알 수 있듯,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활동 차원을 조합해 재분류한 결과, (정치모임, 사회봉사클럽, 시민단체·소비자 협동조합 중) 1개 모

원 설문지에는 이 외에도 주민협회, 반사회, 동창회, 노동조합, 직업·직능 단체/상거래 단체 가담 여부도 각각 응답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이들 모임 가입 여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반사회나 동창회, 직업 단체 등의 가담 여부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주거지나 직업 종류, 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기에 개인의 NPO 참여 의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적절한 변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모임 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참가 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함께 기획할 수 있는 5개 모임의 가입 여부만을 활용하였다.⁹⁾

두 번째 종속변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이다. 설문은 지난 1년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스포츠·문화·예술·학술 자원봉사’, ‘취약집단 관련 활동’, ‘정치 이슈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들 모두에 참여한 바가 없는 경우 ‘경험 없는 자(기준범주=0)’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들 4개의 자원봉사 활동 중 어느 하나에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공활동에 참여한 자’로 분류된다.¹⁰⁾

임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 134명, 1개 모임 이상 가입했으나 모두 거의 참여 안 하는 자 132명, 모임 미가입자 1,004명으로 확인됐다.

NPO 미가입자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 논문의 초점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입자와 거의 참여하지 않는 자 사이의 관계도 초점의 대상은 아니다.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은 참여의 강도가 아닌 참여 여부에 있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실증분석 2의 공공활동 참여 여부 분석에서도 유지된다. 따라서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분석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종속변수는 NPO 가입/미가입의 이항 선택(binary choice)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표 1〉 NPO 활동 차원

(단위: 명)

	구성원이다. (모임에 적극 참여)	구성원이다. (모임 거의 참여 안 함)	구성원 아니다.	합계 (명)
정치모임	16	60	1,194	1,270
사회봉사클럽	117	105	1,048	1,270
시민단체·소비자 협동조합	29	62	1,170	1,270

9) 소비자 협동조합을 비영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설문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가입 여부를 한 번에 묻은 까닭에, 이 둘을 분리하기 어렵다. 이에 이 논문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가입도 NPO 가입으로 인정하였다.

10) 질문은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공공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이며, 이하 4가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해 참여 여부를 ‘그렇다’ 와 ‘아니다’ 중 하나에 각각 표기하도록 했다. 해당 자원봉사 활동은 ①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예: 환경 개선, 치안, 지역 분위기 활성화 등), ② 스포츠·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예: 스포츠 지도, 전통문화 촉진, 기술적 지식 혹은 기술 제공 등), ③ 사회적 취약집단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예: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④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활동(예: 청원서 서명, 집회·시위 참가 등)이다.

스포츠·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강제성 있는 활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설문은 반드시 조직 가입을 전제로 한 자원봉사 활동만으로 제한해 물은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 비영리조직에 소속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공익을 위

2)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학력¹¹⁾, 직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연령은 조사 시점 때, 만 나이이며, 학력은 졸업과 재학은 최종학력으로 인정했지만, 자퇴는 마지막 학력에서 한 단계 강등한 지위를 교육수준으로 인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고졸 이하인 자(0), 전문대 이상의 학력 보유자(1)로 코딩하였다.

(2) 자원 요인

첫 번째 변수는 '가구 소득'이다. 응답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 등을 모두 합산했다. 이는 세금 공제 이전의 금액이다. 농업 등의 경우는 연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적도록 했으며, 모든 동거/비동거 가구원의 소득을 파악해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를 공유하지 않는 가구원은 제외된 값이다.

문제는 가구의 소득이 없다고 기록한 사람이다. 가구 소득이 0원이라고 기록한 응답자는 23명 존재했는데, 이들의 소득에 자연로그를 씌우면 값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는 것 또한 개인의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이기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과 똑같이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은 1만 원으로 치환하여 입력한 후, 자연로그를 씌웠다.

두 번째 변수는 '주당 노동시간'이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각기 답한 일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을 변수화하였다. 세 번째 변수는 '지난 몇 년간 본인 가구의 경제 상태의 변화 정도'이다. '상당히 나빠졌다(0)'를 기준으로 하여, '다소 나빠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좋아졌다.', '상당히 좋아졌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했다. '월 가구 소득'과 '가구의 경제 상태 변화 정도' 변수는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객관과 주관적 상태를 알려주는 변수들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유무는 자원봉사 활동을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한 개인의 활동으로 볼 여지는 있다. 회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mutual benefits)라 할지라도 집단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단체나 공익과 사익은 혼합되어 있기에, 비영리단체 간의 공공성 차이는 하나의 연속선 상에서 정도의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박상필, 2011). 특히 KGSS 사회조사가 공공활동을 (조직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영역의 자원봉사 경험 여부로 설문한 만큼, 설문의 취지를 살려 각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자원봉사로 규정해 답한 바를 공공활동 참여로 인정하였다.

11) 서당 학력을 가진 자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하였다.

자녀가 있을수록 학교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입한 것이다.

(3) 이념 및 사회자본 요인

‘비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장’에 대한 신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기준범주로, ‘매우 신뢰한다’까지의 4단계 답변을 변수로 만들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일반적으로 타인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도록 한 것으로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부터 ‘항상 신뢰할 수 있다’까지 4개 답지가 마련돼 있다. 기준범주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이다.

‘이질적인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용이성’은 공공의 관심사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 있는 경우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묻고 있다. 이 설문은 나보다 다른 견해를 지닌 자의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은 자, 낮은 자, 동등한 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정도를 각각 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나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정도는 변수 정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과의 대화 용이성을 평균화해 하나의 변수로 만들었다. 함께 의논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를 기준범주로 ‘상당히 어렵다’까지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는 사람들이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질문을 활용했다. 답변으로 ‘자신만을 위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남을 도우려고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이 중 ‘자신만을 위한다’를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장기거주’는 개인의 주거 이동성향과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적응 정도와 친숙 여부를 가늠해주는 변수다. 같은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장기거주(1)로 설정하였고, 10년 미만의 기간을 산 경우엔 기준 범주(0) 값을 갖도록 했다.

정치적 효능감과 이념성향 변수로는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중도 여부’를 투입하였다. 먼저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은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에서부터 전적으로 반대까지 총 7개 선택지 중 하나에 표하도록 했다. ‘전적으로 동의’ 즉, 국정에 대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쪽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이 변수는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알려주는 대리 지표로 활용되었다.

정치적 성향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했다. 답지는 '매우 진보'를 기준범주로 하여, 다소 진보, 중도, 다소 보수, 매우 보수까지 총 5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도 여부' 변수는 여기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로 답한 사람을 기준 범주(0)로 하여, 진보나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을 비중도 성향(1)으로 자로 구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압축해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변수 선정과 측정

(*: 기준범주)

구분	변수	단위	측정
종속①	NPO(공공조직) 가입 여부	0*	0: 정치모임, 사회봉사클럽, 시민단체, 소비자 협동조합未가입
		1	1: otherwise
종속②	공공(봉사)활동 참여 여부	0	0: 지역사회 개선, 스포츠·문화·예술·학술, 취약집단 관련, 정치적 이슈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無
		1	1: otherwise
독립 변수	In 월 가구 소득	0~9	세금 공제 이전의 월평균 총소득
	주당 노동시간	시간	고용된 근로자, 자영업자의 주당 노동시간
	가계 경제 변화 정도	0~4	0: 상당히 나빠졌다, 1: 다소 나빠졌다, 2: 차이가 거의 없다, 3: 다소 좋아졌다, 4: 상당히 좋아졌다
	비영리조직과 장애 대한 신뢰	0~3	0: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별로 신뢰하지 않음, 2: 다소 신뢰, 3: 매우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	0~3	0: 항상 조심해야, 1: 대체로 조심해야, 2: 대체로 신뢰 가능, 3: 항상 신뢰 가능
	이질적인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용이성	0~3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거나 낮은 등) 이질적인 사람과 공공의 이슈를 의논하기 쉬운 정도 0: 전혀 어렵지 않다, 1: 별로 어렵지 않다 2: 다소 어렵다, 3: 상당히 어렵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	0~2	0: 자신만 위한다, 1: 경우에 따라 다르다, 2: 남을 돕는다 같은 지역(동네/도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는가? 0: 10년 미만, 1: otherwise
	장기거주	0/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의견 표명의 용이성 정도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0~6	0: 전적으로 어렵다 1: 상당히 어렵다 2: 약간 어렵다.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쉽다 5: 상당히 쉽다 6: 전적으로 쉽다
정치적 성향	0~4	0: 매우 진보적, 1: 다소 진보적, 2: 중도, 3: 다소 보수적, 4: 매우 보수적	
중도 여부	0/1	0: 중도, 1: 보수 또는 진보	
통제 변수	성별	0/1	0: 남 1: 여
	연령	세	조사 시점 기준, 만 나이
	학력	0/1	0: 고졸 이하 1: 전문대 이상
	직업	0~2	0: 무직, 1: Blue, 2: White
자녀 유무	0/1	0: 자녀 무, 1: 자녀 유	

주) 월평균 총소득은 귀하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등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세금 공제 이전의 소득으로 추계됐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표 3〉은 첫 실증분석의 종속변수인 NPO(공공조직) 가입 여부에 관한 간략한 통계 숫자를 담고 있다. 실증분석 1의 분석 대상 1,270명 중 공공조직인 NPO(정치모임, 사회봉사클럽,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266명으로 다수가 미가입 상태(1,004명, 79%)이다. 가입 후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 1개 이상인 사람이 134명, 1개 이상의 조직에 가입했으나 모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132명이다. 가입자만 놓고 보면, 적극 참여자(50.38%)와 거의 참여하지 않는 자(49.62%)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는 두 번째 종속변수인 공공활동(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이다. 340명(26.67%)이 공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자이며, 935명(73.33%)은 경험 없는 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 사회 봉사활동, 스포츠·문화·예술·학술 봉사활동 순으로 많다. 정치 이슈 관련 공공 봉사활동 참여자가 가장 적다.

〈표 3〉 종속변수 ①의 기술통계

	종속변수①	명 (%)		명 (%)
NPO 가입	미가입*	1,004 명 (79.06%)	—	
	가입	266 명 (20.04%)	적극 참여	134 명 (50.38%)
			소극 참여	132 명 (49.62%)
계		1,270 명 (100.00%)		

〈표 4〉 종속변수 ②의 기술통계

	구분	인원	%	활동 내용	인원
공공 (봉사)활동 참여 경험	없음*	935 명	73.33	—	
	있음	340 명	26.67	지역사회 봉사활동	177 명
				스포츠·문화·예술·학술	113 명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활동	199 명
				정치 이슈 관련 활동	72 명
		1,275 명	100.00		

〈표 5〉는 표본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첫 종속변수인 NPO 가입 여부는 가입자가 21%, 미가입자가 79%로 미가입 상태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공공활동 참여 여부도 참여 경험이 없는 자가 73%로 경험이 있는 자(27%)보다 많다.

성별은 남성 579명(45%), 여성 696명(55%)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62세로, 만 18~95세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평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며, 6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졸 이하 학력자이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479명(38%)이다. 평균 직업은 블루칼라 직업군(평균 1.03)이고, 자녀를 낳은 사람(76%)이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았다.

가구소득액은 월평균 340만 원으로, 최저 소득액은 1만 원이며 최대 월 4,700만 원의 소득을 버는 가구까지 분포했다. 이 값에 자연로그로 처리한 결과 평균 5.29, 최대 8.46로 변환되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약 26시간이다. 최소 노동시간은 0시간, 최대 주당 노동시간은 140시간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가계 경제 변화 정도에 대해선 평균 1.97로 나타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견해가 많았다. 비영리조직과 그 기관장에 대한 신뢰도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이 평균에 자리했다. '다소 신뢰'와 '매우 신뢰'를 합한 비율은 82%에 이른다.

이질적인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쪽이 평균이며, 실제로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측면에선,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평균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와 '항상 조심해야 한다'를 합한 비중은 59%에 이른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는 평균치가 1.11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2)'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견해는 상당히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하는 사람이 가장 우세해 평균으로 나타났으며,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쉽다는 견해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정치적 성향은 자신을 중도라고 보는 사람이 평균에 해당한다. 자신을 매우 진보(6%)나 매우 보수(8%)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다소 진보', '중도', '다수 보수'가 서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중도와 비 중도로 성향으로 묶어 보면, 중도는 31%이고 나머지 69%가 비중도 성향(진보나 보수)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한 지역에 장기 거주한 자가 46%를 차지했다.

〈표 5〉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NPO 가입 여부(0=미가입)	1,270	.21	.41	0	1
공공활동 참여 여부(0=미참여)	1,275	.27	.44	0	1
성별(남=0)	1,275	.55	.50	0	1
전체 연령(세)	1,275	50.62	4.35	18	95
남성 연령(세)	579	49.15	18.10	18	95
여성 연령(세)	696	51.72	17.65	18	90
학력(0=고졸 이하)	1,275	.38	.48	0	1
직업(0=무직)	1,275	1.03	.60	0	2
자녀 유무(0=무)	1,275	.76	.43	0	1
연 가구 소득(단위: 만원)	1,275	340	356	0	4,700
ln 연 가구 소득	1,275	5.29	1.28	0	8.46
주당 노동시간(단위: 시간)	1,275	25.98	27.82	0	140
최근 가계 경제 변화 정도(0=상당히 나빠졌다)	1,275	1.97	.96	0	4
비영리조직과 장에 대한 신뢰(0=전혀 신뢰 안 한다)	1,275	2.16	1.02	0	4
사람들에 대한 신뢰 (0=항상 조심해야 한다)	1,275	1.70	.75	0	3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 (0=자신만을 위한다)	1,270	1.11	.83	0	2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용이성 (0=전혀 어렵지 않다)	1,275	1.38	.64	0	6
국정에 대한 의견 개선 용이성 (0=전적으로 어렵다)	1,275	1.76	1.50	0	6
정치적 성향(0=매우 진보)	1,275	2.16	1.02	0	3
중도 여부(0=중도)	1,270	.69	.46	0	1
장기거주 여부(0=단기거주)	1,270	.46	.50	0	1

2. 로짓 분석(1): NPO 가입 여부

〈표 6〉은 개인이 NPO에 가입하도록 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에는 성별,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Model I을 살펴보면, NPO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 소득, 국정에 대한 의견 개선 용이성, 정치적 성향이다. ln 월 가구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NPO에 가입할 승산비는 1.44배씩 늘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도 국정에 대해 의견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NPO에 가입하는 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또 ‘진보 성향’의 사람일수록 NPO 구성원일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커짐에 따라, NPO에 가입할 확률은 13%씩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NPO

에 가입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고, 자녀가 있다면 NPO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이내 자신의 가구 경제 상태에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와 비영리조직의 기관장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등은 NPO 가입 가능성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표 6〉 NPO 가입 여부 로짓 분석

	Model I		Model II		Model III	
	Exp(b)	S. E.	Exp(b)	S. E.	Exp(b)	S. E.
In 월 가구소득	1.44 ***	.12	1.42 ***	.12	1.42 ***	.12
1주당 노동시간 (단위: 10시간)	.97	.03	.97	.03	.97	.03
가계 경제 변화 (0=상당히 나빠졌다)	1.06	.08	1.05	.08	1.05	.08
비영리조직과 기관장에 대한 신뢰 (0=매우 불신)	.98	.07	.98	.07	.98	.07
사람들에 대한 신뢰 (0=항상 신뢰할 수 있다)	1.06	.10	1.04	.10	1.04	.10
이질적 타인과의 의사소통 (0=전혀 어렵지 않다)	.94	.11	.96	.11	.95	.11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 (0=자신만을 위한다)	1.17	.10	1.17	.10	1.17	.10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0=전적으로 어렵다)	1.11 *	.05	1.12 *	.05	1.12 *	.05
정치적 성향 (0=매우 진보)	.87 *	.06				
중도 여부 (0=중도)			1.48 *	.24	1.54	.37
중도 여부*성별					.93	.30
성별 (0=남)	.67 *	.10	.69 *	.10	.73	.21
연령	1.00	.01	1.00	.01	1.00	.01
학력(0=고졸 이하)	1.17	.21	1.16	.22	1.16	.21
직업 유형 (0=무직)	.88	.12	.89	.12	.89	.12
자녀 유무 (0=없음)	2.25 *	.59	2.21 **	.59	2.22 **	.58
Cons	.02 ***	.01	.01 ***	.01	.01 ***	.01
LR-Chi	63.16 (14)		65.20		65.25	
P-value of Chi2	0.0000		0.0000		0.0000	
N	1,270		1,270		1,270	

주) * p<.05, ** p<.01, *** p<.001. Robust 추정 결과임.

Model II는 Model I에서 활용한 '정치적 성향' 변수를 정치 성향 '중도 여부'라는 이원 변수(binary variable)로 변환하여 분석한 것이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밝힌 경우는 비 중도로, 중도라고 표현한 경우는 중도 성향(0)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중도 성향인 자에 비해 진보나 보수 성향을 지닌 개인은 NPO(공공조직)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출됐다. 그러나 이러한 중도 여부가 NPO 가입에 미치는 힘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Model III).

〈표 7〉은 이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띤 변수들을 중심으로 NPO에 가입할 확률의 변화 정도를 추계하고 있다. 다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했을 때, 월 소득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적은 소득액을 버는 사람에 비해 NPO에 가입할 확률이 36.82%p 더 높다. 자신과 같은 사람도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용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에 비해 NPO 가입 확률이 10.87%p 높다.

또 매우 보수적인 사람은 매우 진보적인 사람에 비해 NPO 회원일 확률이 8.5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이 중도인 사람과 비교해 진보이든 보수이든 특정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은 NPO 가입 확률이 5.85%p 높게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남성의 NPO 가입 확률이 여성보다 6.23%p 더 높다. 중도 여부는 Model II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나머지 변수의 확률 변화치는 Model I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표 7〉 NPO 가입 확률의 변화(독립변수 최소→최대 효과)

(단위: %p)

변수	확률 변화	95 % 수준 신뢰구간
ln 월 가구 소득	.3682	[.2428 .5536]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1087	[.0065 .2110]
정치적 성향	-.0856	[-.1700 -.0012]
성별	-.0623	[-.1092 -.0154]
중도 여부	.0585	[.0134 .1036]

3. 로짓 분석(2): 공공활동 참여 여부

〈표 8〉은 개인이 공공활동에 참여케 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앞선 모형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 변인을 함께 투입하였다. 공공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월 가구 소득', '주당 근로시간', '현 지역 장기거주',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이다.

월 가구 소득이 늘어날수록 공공활동 참여 확률은 높아진다. ln 가구 소득이 1% 높아

질 때마다, NPO 참여 확률은 1.2배씩 상승한다. 주당근로시간은 공공활동 참여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근로시간이 늘수록 공공활동을 할 확률은 낮아진다는 뜻이다. 주당 노동시간이 10시간 늘어남에 따라 NPO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은 5%씩 감소한다.

현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자는 공공 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34% 높고,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쉽다고 느낄수록 공공활동에 참여할 확률도 1.1배씩 커졌다. 한편, NPO 가입 분석에서 유의미했던 정치적 성향은 공공활동 참여 분석에서는 영향력을 띠지 못했다.

〈표 8〉 공공활동 참여 여부 로짓 분석

	Model I		Model II		Model III	
	Exp(b)	S. E.	Exp(b)	S. E.	Exp(b)	S. E.
ln 월 가구소득	1.20 *	.09	1.20 *	.09	1.18 *	.08
주당 노동시간 (단위: 10시간)	.95 *	.03	.91 **	.03	.95	.03
주당 노동시간 * 성별			1.09	.05		
가계 경제 변화 (0=상당히 나빠졌다)	1.01	.07	1.00	.07	1.00	.07
비영리조직과 기관장에 대한 신뢰 (0=매우 불신)	.96	.06	.96	.06	.95	.06
이질적 타인과의 의사소통 (0=전혀 어렵지 않다)	.95	.06	.95	.10	.97	.10
장기거주	1.34 *	.19	1.33	.19	1.89 **	.36
장기거주 * 성별					.46 **	.13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0=전적으로 어렵다)	1.10 *	.05	1.10 *	.05	1.10 *	.05
정치적 성향 (0=매우 진보)	.99	.06	.99	.06	.95	.06
성별 (0=남)	.54 ***	.08	.43 ***	.08	.77	.14
연령	.99 *	.01	.99 *	.01	.99 *	.01
학력 (0=고졸 이하)	1.55 **	.26	1.56 **	.26	1.58 **	.26
직업 유형 (0=무직)	.92	.11	.91	.11	.90	.11
자녀 유무 (0=없음)	1.46	.33	1.52	.35	1.40	.31
Cons	.47	.30	.29 *	.18	.23	.24
LR-Chi	83.93 (13)		87.02		92.07	
P-value of Chi2	0.0000		0.0000		0.0000	
N	1,275		1,275		1,275	

주) * p<.05, ** p<.01, *** p<.001. robust 추정 결과임

이 외에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 학력이 높을수록 활동 참여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직업이나 자녀 유무는 활동 가능성에 통계적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

Model II와 Model III는 각기 주당 노동시간과 성별 그리고 장기거주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공공활동 참여에 미친 효과는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거주의 효과는 성에 따라 달라, 장기거주의 효과는 여성에게 더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해보면, 한 지역에 오래 살수록 공공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커지나, 그 상승의 폭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크다는 것이다.

〈표 9〉는 이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띤 변수들을 중심으로 NPO의 구성원이 될 확률의 변화 정도를 추계하고 있다. 다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했을 때, 월평균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가장 적은 소득액을 버는 사람에 비해 정치 참여 등 공공 봉사활동에 참여 확률이 25.94%p 더 높다. 주당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은 최저 시간 노동자와 비교해 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이 12.57%p 낮다. 한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효과는 공공 봉사활동 참여 확률을 5.47%p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거주의 효과는 여성에게는 적게 나타나, 여성 장기 거주자의 경우 남성 단기거주자와 비교해 NPO 활동 가능성이 25.48%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정에 대해 의견 개진이 ‘매우 용이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에 비해 봉사 참여 가능성이 11.61%p 높다.

〈표 9〉 공공활동 참여 확률의 변화 (독립변수 최소→최대 효과)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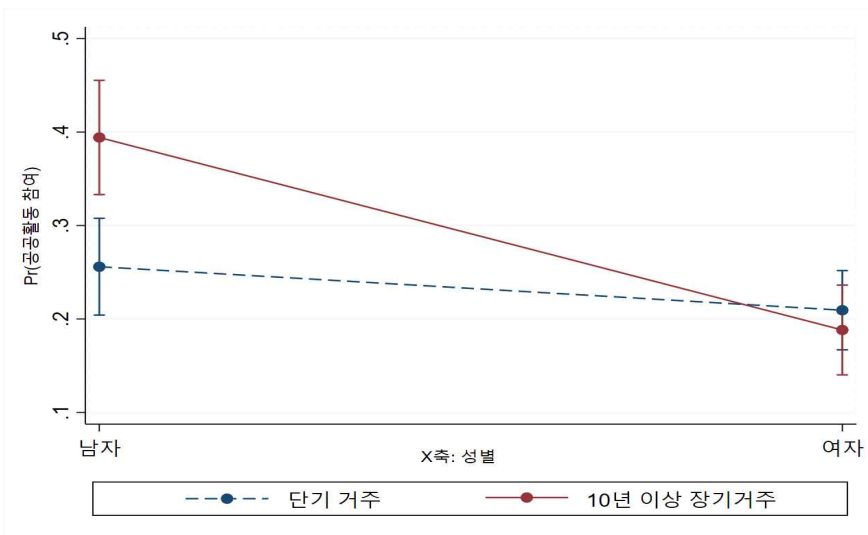
변수	확률 변화	95 % 수준 신뢰구간
ln 월 가구소득	.2594	[.0817 .4371]
주당 노동시간	-.1257	[-.2317 -.0196]
장기거주	.0547	[.0005 .1089]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1161	[.0065 .2256]
성별	-.1163	[-.1680 -.0645]
연령	-.1925	[-.3601 -.0249]
학력	-.0843	[-.0205 -.1481]

마지막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봉사활동 참여 확률이 11.63%p 더 높으며, 최저 연령자인 18세에 비해 95세인 사람의 참여비율은 19.25%p 떨어진다.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

도 고졸 이하 학력자와 비교해 정치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크게 8.43%p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는 장기거주와 성(性)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10년 이상 한 지역에 장기 거주한 효과는 여성에게는 적게 나타나게 돼, 결국 장기거주 여성은 한 지역에 단기거주 여성에 비해서도 낮은 봉사활동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성(性)과 장기거주에 따른 공공활동 참여 확률



V. 결론

두 차례의 실증분석에서 발견된 중요한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소득이 NPO 가입자 수 확대와 공공활동 참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의 증대는 비정부 분야의 규모와 역량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요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보다 절대 소득액이 NPO 참여에 더 큰 동인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본인 가계 경제에 대한 평가는 모두 NPO 가입이나 공공활동 참여에 통계적인 설명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슈를 다루는 일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망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일이나, 개인들이 이 행위에 동참할지를 선택하는 데에는 자신들의 객관적 상태가 동인이 되고 있다.

둘째, 긴 노동시간이 실질적인 공공활동 참여를 막는 중대한 저해 요인이 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장기간 노동은 공공활동(자원봉사) 참여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가장 극단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가능성이 12.57%p 낮은 것으로 도출됐다.

그러나 되짚어야 할 점은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NPO 참여가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NPO 활동이 다른 여가 활동과 대체 경쟁 관계임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이 여유 시간에 다른 개인 활동과 공공활동 참여를 놓고 벌이는 선택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활동 참여가 다른 여가 활동과 비교해 가치 있고 투자할 만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생활 밀착형 혹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형 참여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참여가 축적되면, 더 크고 거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숙의할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 ‘지역적 기반’ 요인이 매우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현 거주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실은 공공의 봉사활동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활동이 지역적 기반 위에서 더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장기거주의 효과는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그 효과가 작다. 남성들은 한 지역에 장기 거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원봉사 같은 공공활동을 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 기반의 공공 봉사활동들이 특정 성(性)에게 편향적인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편 물리적 이동성이 강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공공영역에 참여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 이슈를 쉽게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작게나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넷째, 정치 성향이 비영리 영역에서의 참여와 활동을 늘리는 데 일정 수준 의미가 있었다. 자신을 진보진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NPO에 가입할 확률이 더 높았다. 시민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힘이 진보 성향 그룹에서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 비영리 영역의 활동 방향과 가치가 진보의 가치와 부합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겠다. 이는 진보 성향 사람들이 단체 가입에 더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모종린, 2004; 정한울, 2016).

‘국정에 대해 의견 개진이 용이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던 것도 이를 방증해준다. 국정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워 시민사회를 선택했다기보다, 의견 개

진의 한 통로로 NPO 참여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비영리 기관과 그 장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이 없게 도출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시민들은 NPO 가입 시 기관장이나 기관 내부 운영 과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NPO가 내세우는 가치나 정치적 이념이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지를 놓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민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NPO 가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유를 분석해볼 가치가 있겠다. 한국 시민운동계가 학생운동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주도해 성장한 점,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 권력과 관료주의에 맞서 대항해온 역사가 이러한 현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시민사회 영역은 타 진영과 머물 수 있는 '공존의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NPO 영역은 정치적 투쟁을 넘어, 시민으로서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학습의 장이다. 이 안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운영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특정 정파가 비영리 영역에서 지나친 우위를 점한다면 NPO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 대화하는 경험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대면 토론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시민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치·사회적 타자와의 공존을 학습하면서, 시민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를 통해 시민성은 다시금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호. (2014). "그들만의 민주주의, 시민은 어디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19.
- 남궁근. (2007). "행정학자의 시민단체 참여 활동 성과와 한계: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행개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45-66.
- 모종린. (2004). 『시민단체 대표성 연구』. 서울: 자유기업원.
- 박상필. (2001). 『NGO와 현대 사회』. 서울: 아르케.
- 박태규. (2006). "한국 비영리 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계간 국민 계정』, 2006(4): 44~77.
- 박태규·정규현. (2002). "한국 비영리 부문의 규모 추계와 구조". 『한국비영리연구』, 1(2): 3~31.

- 옥일남. (2017). “시민성 교육을 위한 참여의 유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49(2): 55-88.
- 우국희·홍선미. (2009). “비영리단체에서의 중·고령 퇴직자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3): 105-141.
- 이강현·김성경. (1999). 「'99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 현황」. 서울: 불린티어 21.
- 임기성·박봉규. (2013). “리더에 대한 부하의 진정성 지각이 신뢰, 가치 일치 및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8(1): 95-111.
-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
- 정한울. (2016). “한국사회 시민단체 신뢰 위기의 진단과 대안 모색: 정부-시민단체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치적 시민단체의 위축”. 「시민과 세계」. 29: 85-123.
- 조효제. (2000). “참여의 예술, 변혁의 과학: 지속 가능한 NGO 운동의 모색”. 「NGO의 시대: 지구 시민 사회를 향하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주성수. (2017). “한국 시민사회 30년(1987-2017)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NGO」, 15(1): 5-38.
- 통계청. (2020). 「2019 한국의 사회지표」.
- Ayala, L. J. (2000). Trained for Democracy: The Differing Effects of Voluntary and Involuntary Organizations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3(1): 99-115.
- Bachrach, P. (1967).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Boston: Little, Brown.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Ner, A. (1986). *Nonprofit Organizations: Why Do They Exist in Market Economies?* in SUSAN ROSE-ACKERMAN, ed. pp. 94-113.
- Blumberg, P. (1968). *Industrial Democracy*. NY: Schocken.
- Brooks, A. C. (2002). "Can Nonprofit Management Help Answer Public Management's Big Ques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3): 259-266.
- Butcher, H. (2007). 'Power and empowerment: the foundation of critical community practice', in H. Butcher, S. Banks and P. Henderson with J. Robertson (eds) *Critical community practice*, Bristol: The Policy Press.
- Caldwell, S. D., Farmer, S. M. & Fedor, D. B. (2008). The Influence of Age on Volunteer Contributions in a Nonprofit Organiz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9(3): 311-333.
- Castaldo, S., Perrini, F., Misani, N., & Tencati, A. (2009). The Missing Link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 Trust: The Case of Fair Trade Produc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4(1): 1-15.
- Cole, G. D. H. (1917). *Self Government in Industry*. London: Bell.
- Clotfelter, C. (1992). *Who benefits from the nonprofit sector?*. Chicago: Chicago Univ Press.

- Dahl, R. A. (1970). *After the R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dwards, M. (2020). *Civil Society*. Malden, MA: Polity Press.
- Eggers, F., M. O'Dwyer, S. Kraus, C. Vallaster, & S. Guldenberg (2013). The Impact of Brand Authenticity on Brand Trust and SME Growth: A CEO Perspective. *Journal of World Business*, 48(3): 340-348.
- Evarts, B. & Stein, G. P. (2020). U.S. Fire Department Profile 2018. Quincy, Ma: NFPA.
- Hansmann, H. (1987). Economics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Walter W. Powell(ed.), *The Nonprofit Sector*: 27-42.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Hayek, F.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dgkinson, V. A., Weitzman, M. S., Abrahams, J. A., Crutchfield, E. A. & Stevenson, D. R. (1996). *Non-profit Almanac 1996-1997*. SF: Jossey-Bass Publisher.
- James, E. & Rose-Ackerman, S. (1986). *The Nonprofit Enterprise in Market Economics*. N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OECD. (2019a).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9b).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Putnam, R. D. (1995a).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_____. (1995b). Bowling alone Revisited. *The responsive Community*. 5(2): 18-33.
- Ravald, A. & Grönroos, C. (1996). The Value Concept and Relationship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0(2): 19-30.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95.
- Rose-Ackerman. (1996). Altruism, Nonprofits,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2): 701-728.
- Salamon, L. (1995). *Partners in Public Servi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elander, K. (2015). Work Engagement in the Third Sector.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6(4): 1391-1411.
- Smith, S. R. & Grønberg, K. A. (2006). Scope and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In Walter W. Powell, & Richard Steinberg(Eds). *The Nonprofit Sector :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lexis de. (1969). *Democracy in America*, ed. J. P Mayer. San Francisco: Harper & Row.
- Long, J. S. & Freese, J. (2006).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College Station, TX: StataCorp LP.
- Mason, Ronald. (1982). *Participatory and Workplace Democracy*.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Marwell, N. P. (2004). Privatizing the Welfare State: Nonprofit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s Political Acto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2): 265-291.

Miszlivetz, F. (1999). Civic or civil society? Hungarian Television channel 2, 23 March, In F. Csefkó and Cs. Horváth (eds) *Hungarian and European civil society*, Pécs: Friedrich Ebert Stiftung.

Nelson, R. & Krashinsky, M. (1973). Two Major Issues of Public Policy: Public Policy and Organization of Supply. In Richard Nelson & Dennis Young(eds.), *Public Subsidy for Day care of young children*. Lesington, Mass: D. C. Health & Co.

Warren, R. (1963). *The community in America*. Chicago, IL: Rand McNally

Weisbrod, B. A. (1988). *The nonprofit economy*. Cambridge, MA: Harvard U. Press.

ABSTRACT

A Driving Force for Civil Society Participation: Membership in NPOs and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Public

Jooyoung Lee

This analysis aims to investigate factors contributing to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he frame of membership in NPOs and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public. The data are drawn from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conducted by the survey research center of Sungkyunkwan University in 2012.

The analysis found household income helps increase membership and volunteer activity. An increase in weekly working hours has a negative effect on volunteering while long-term residence has a positive impact. In particular, longer residence interacts with gender. High political efficacy drives people to join NPOs and do volunteer work. Those who think of themselves as politically liberal have an propensity to be members of NPOs. Lastly, trust in others and in NPOs and NPOs' leaders have no significant meaning for civil particip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active civil participation can be enhanced through sufficient leisure time and concrete political efficacy as well as through economic growth. Channels for diverse citizen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any specific political stance from predominating over others. A school curriculum that can secure enough class hours to discuss local issues with others with disparate opinions can be invaluable.

【Keywords: civil society, NPO, volunteer activity, NGO】